

코로나19 치료비 1000억 육박 건보가 80% 부담... 재정압박

나머지 20% 국가·지자체 부담

에코모 사용 중증환자 치료비
최소 5500만~최대 7000만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로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이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80%를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계호흡이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코모(ECMO)를 사용해야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최소 5500만원부터 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8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환자를 위중, 중증, 경증 등으로 나눠서 평균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위중환자의 치료비는 최소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중증도환자는 약 1196만원, 경증환자의 경우, 병원급 입원을 가정했을 때 331만원, 종합병원 입원을 가정하면 478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비 수준이 다르다.

(코로나19 확진자수에 따른 진료비 추정치) (단위: 명, 억원)

전체 환자수	경증환자 진료비		중증도환자 진료비	중증환자 진료비	합(억원)	
	최소	최대			최소	최대
7,000	116	167	410	49	575	627
8,000	132	191	469	56	657	716
9,000	149	215	527	63	739	806
10,000	166	239	586	70	822	895
11,000	182	263	645	77	904	985
12,000	199	287	703	84	986	1,074
13,000	215	311	762	91	1,068	1,164
14,000	232	335	820	98	1,150	1,253
15,000	248	359	879	105	1,232	1,343

이 치료비 가운데 환자의 부담금은 전혀 없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환자는 전액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다.

경증환자는 말 그대로 증상이 가벼운 질환자, 중증 환자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지만, 폐렴 등 증상으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를 받는 등의 환자를 지칭한다. 중증 환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을 이용하고, 인공호흡기 치료에 220만원, 지속적 혈액투석에 740만원, 에코모에 108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1만10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총 진료비는 최소 904억원에서 최대 985억원에 달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봤다. 환자가 1만2000명으로 늘어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1074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양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만810명이다. 1일 0시 기준, 43일 이상 격리된 환자 수가 1035명이고, 이 중 711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324명이 격리 중이다. 중증도별로는 위중 환자 47명, 중증 환자 28명, 경증·무증상 환자가 960명이었다. 경증·무증상 환자는 70.4%인 676명이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위중 환자는 36.2%인 17명만 격리 해제됐다.

중양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만810명이다. 1일 0시 기준, 43일 이상 격리된 환자 수가 1035명이고, 이 중 711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324명이 격리 중이다. 중증도별로는 위중 환자 47명, 중증 환자 28명, 경증·무증상 환자가 960명이었다. 경증·무증상 환자는 70.4%인 676명이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위중 환자는 36.2%인 17명만 격리 해제됐다.

중양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만810명이다. 1일 0시 기준, 43일 이상 격리된 환자 수가 1035명이고, 이 중 711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324명이 격리 중이다. 중증도별로는 위중 환자 47명, 중증 환자 28명, 경증·무증상 환자가 960명이었다. 경증·무증상 환자는 70.4%인 676명이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위중 환자는 36.2%인 17명만 격리 해제됐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환자가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포스코그룹, 물류 자회사 추진

이르면 이번주 설립여부 결정

포스코그룹의 물류 자회사 설립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8일 오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의결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포스코가 물류업 진출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포스코는 2009년 대우로지스틱스 인수에 나섰다 실패했다. 포스코는 이후 대한통운, 대우로지스틱스 인수작업에도 착수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물류역량 강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터미널 등에 각각 흡수된 원료 수송과 물류업무를 통합하는 '매머드급' 물류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미 세계에서는 현대·기아차가 현대글로벌로지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로지텍, LG가 판토스라는 회사를 두며 종합 물류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다만 포스코그룹의 물류 자회사 설립에 대한 반발은 거세다. 특히 철광석, 석탄 등 원재료 물자 운송을 책임져



포스코 대치동 사옥.

은 해운업계의 우러가 크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지난달 청와대, 정부, 국회에 포스코의 물류주선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해양·해운·항만·물류 산업 50만 해양가족 청원서'를 제출했다. 또 포스코와 물류전문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운업계는 포스코가 물류업에 진출하면 자회사가 일종의 수수료인 통행세를 걷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는 연간 철광석을 비롯 한 제철원료 8000만톤을 수입하고 철강제품 2000만톤을 수출하는 초대형 회사다.

/양성운 기자 ysw@

1.2조 4세대 방사광가속기 설치 후보지에 '균형발전' 나주 vs '입지탁월' 오창

과기정통부, 오늘 최종부지 발표
연내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2022년 착수, 2028년 완공 예정

1조2000억원대 초대형 프로젝트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설치 후보지로 전남 나주, 충북 청주(오창)가 선정돼 경쟁이 '2과전'에 접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방사광가속기 최종 부지를 발표할 계획이며, 올해 안에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2022년에는 사업에 착수해 202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오전에 나주를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오창을 방문했다. 현장 실사 평가 점수를 반영해 우선협상대상자 1곳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장에 치명적인 결함이 없는 한 1순위 후보자가 최종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후보지 2곳에 대한 순위와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6일 과기정통부 방사광가



방사광 가속기 조감도. /나주시

속기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대전시 인티시호텔에서 유치계획서를 제출한 충북 오창·경북 포항·전남 나주·강원 춘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치 계획 발표 평가를 진행해 나주와 오창 등 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전남 나주는 100점 중 최고인 50의 점수가 달린 '입지 조건' 중 미래자원 확장 가능성, 국가균형 발전 기여 가능성, 부지안정성 뿐 아니라 차별화된 지자체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내세웠다.

나주혁신도시는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고속철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후보지 중 고속철도 역사와 가장 가까운 8분 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광주시와 공동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3월에 개교할 예

정인 한전공대와 나주 한전 본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특히 나주는 대형 첨단연구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할 때 방사광가속기가 이곳에 유치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정치권에서도 국가균형 발전론에 내세왔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충북 오창은 '입지 조건'에서 나주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창은 경북·중부·중부내륙·중앙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망과 잘 연결돼 전국 2시간 이내 접근성을 강조해왔다. 또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KTX) 분기역인 오송역이 오창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으며,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에서도 차로 5분 거리여서 세계적인 기업, 학자들과의 교류도 가능해진다.

특히 2022년 충남 천안에서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복선철의 수도권 전철망이 준공될 예정이어서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

방사광가속기는 자연재해의 위험을 고려해야 하는데, 화강암반이 넓게 분포해 자연재해의 위험에서도 안전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현대홈쇼핑·이마트24 등 도움손길 '훈풍'

>> 1면 '코로나 고통 나누는...'서 계속

현대홈쇼핑은 동반위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었다. 이는 올해 들어 첫 협약이다.

현대홈쇼핑은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에게 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5일'은 쇼핑업계에 가장 짧은 지급 기간이라는 게 동반위의 설명이다. 또 물품대금 선지급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현대홈쇼핑이 협력을 위해 3년간 지원기로 한 608억원 중 동반성장펀드(400억원) 조성, 직접 금융(100억원)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무료 방송 지원, 해외시장 컨설팅, 협력사 임직원 복지지원 등에 쓰인다.

이마트24는 전국에 있는 4700여 매장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본사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의 결제시스템 혁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비접촉식 결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분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들에게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사업이 좀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KAI는 이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재단에 1차로 올해 상반기까지 50억원, 내년 상반기까지 5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KAI의 상생협력기금은 20여개 중소기업력을 대상으로 항공산업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신기술과 원가 절감 공정 개발, 근무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안현호 KAI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항공산업의 주춧돌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금 출연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중소기업과 함께 항공산업의 발전이 지역 사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은 "KAI가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이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 bada@



유리문 넘어 반가운 인사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요양원에서 가족이 유리창 너머로 면회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입소자 면회 요청이 늘어났지만 요양원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지침대로 직접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뉴스